

## 「정연중의 비문학 FeedBack」은...

①단락별 핵심 정리 + ②정연중T의 확인 질문 + ③선지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②, ③ 모두를 읽어보시되...

1~3등급 학생은 특히 정연중T의 확인 질문(②)을 치열하게 답해봅시다.

3~5등급 학생은 특히 단락별 핵심 정리(①)를 더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6~9등급 학생은 시험지 전체를 3회독 한 후에 「정연중의 FeedBack」을 활용해주세요.

그리고, 선지 해설(③)을 통해 정오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선지가 왜 틀렸지?’ 이후에, ‘근데, 나는 이 선지를 왜 틀렸지?’를 고민해주세요.

## [4~7] 데이터 이동권 지문

(1단락)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태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처리되면 빅 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 데이터 보유자'이다. 산업 분야의 빅 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 ① 빅 데이터의 생성 과정

: 개인의 교통 이용(주체) → 기록(데이터) → 기업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집적·처리 → 빅 데이터(경제적 가치를 지님)

### ② '정보 주체'와 '빅 데이터 보유자'의 정의

### ③ 빅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이유

★ 정연중T : '개인'과 '기업'의 관계를 바탕으로 '빅 데이터'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했나요?

★ 정연중T : 앞으로 '빅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 전개될 거라는 느낌이 오나요?

(2단락)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소유권의 주체를 빅 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 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취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 ① 기업이 소유권의 주체라는 견해와 주장(빅 데이터 생성 및 유통이 활성화될 것이다)

### ② 개인이 소유권의 주체라는 견해와 주장(정보 주체에게도 부가 집중되어야 한다)

★ 정연중T : 1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빅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했고, 그것을 연결고리로 2단락이 전개되는 것을 인지했나요?

★ 정연중T : 각각의 견해와 주장이 '납득' 되던가요?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나요?



(3단락)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⑥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물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① 논의의 중심이 ‘소유권’에서 ‘데이터 이동권’으로 이동

② 데이터 이동권을 명문화(수단) →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목적)

③ 데이터 이동권의 정의

: 정보 주체(개인)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기업)에게 본인 혹은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

④ 데이터 이동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 빅 데이터 보유자(기업)가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생성한 경우에는 데이터 이동권을 행사할 수 없음

⑤ 법제화 이전에도 데이터 이동권과 유사한 서비스(계좌 자동 이체 항목 이동)가 있었음.

⑥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효과(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

★ 정연중T : 데이터 이동권의 ‘정의, 목적, 효과’에 관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어 이해되던가요?

★ 정연중T : 글을 읽으면서 [빅 데이터 보유자가 개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생성’한 경우라면 데이터 이동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법제화 이전에도 데이터 이동권과 유사한 ‘은행 서비스’가 있었다]는 내용이 글의 흐름상 덧붙는 느낌의 ‘추가 정보’처럼 느껴졌나요?

⋮

[A] (4단락)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긴다.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 ① 데이터 이동권을 법제화하여 ‘기업’이 얻은 효과 2가지(생성 비용 절감 + 거래 비용 절감)
- ② 생성 비용의 정의(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
- ③ 거래 비용의 정의(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④ ‘정보 주체’와 ‘㉠’와 ‘㉡’의 관계  
: 정보 주체(권리 행사자) →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권리 행사 대상) →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비용 절감 수혜자)
- ⑤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효과(기업 간 공유나 유통 촉진 + 관련 산업 활성화)

★ 정연중T : ㉠의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3단락의 ‘제3자’이고, ㉡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 3단락의 ‘빅 데이터 보유자’임을 알고 있었나요?

★ 정연중T : 3단락은 데이터 이동권의 명문화로 얻은 효과(자기 결정권 강화)를 중심으로, 4단락은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얻은 효과(비용 절감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글의 흐름을 인지했나요?

- \*명문화 : 법률의 조문에 명시함.
- \*법제화 : 법률로 정하여 놓음.

[B] (5단락)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그런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집적·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

- ① 정보 주체가 데이터를 보안 신뢰성이 높고 혜택을 주는 기업으로 이동하게 한 경우, 기존 기업이 신규 기업에게 데이터 공유해주면? 신규 기업의 생성 비용 절감됨
- ② 정보 주체가 데이터를 보안 신뢰성이 높고 혜택을 주는 기업으로 이동하게 한 경우, 기존 기업이 신규 기업에게 데이터 공유해주지 않으면? 기존 기업의 시장 독점화가 강화될 수도 있음

★ 정연중T : 기존 기업이 신규 기업에게 공유해줄 경우, 생성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부분을 읽을 때 읽기 속도를 ‘가속’하면서 읽었나요? (4단락에서 읽었던 내용이니까)

★ 정연중T : 기존 기업이 신규 기업에게 공유해주지 않을 경우,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읽을 때 읽기 속도를 ‘감속’하면서 읽었나요? (새로운 내용이니까)

★ 정연중T : 4단락과 5단락은 각각 데이터 이동권 법제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글의 흐름을 인지했나요?

5. [A], [B]의 입장에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번 / 오답률 58.9%)

- ① [A]의 입장에서, ㉠은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 ② [A]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라면, ㉣는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되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B]의 입장에서, ㉣가 ㉡와의 거래에 실패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여 ㉢에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면,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겠군.
- ④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에서 ㉣로 이동하여 집적·처리될수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수 있다고 보겠군.
- ⑤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는 ㉡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군.

㉡번 선지(18.5%) : 거래 비용은 ‘계약 체결’ 혹은 ‘분쟁 해결’의 과정에서 생긴다고 했는데, ㉣는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이기 때문에 ‘분쟁 없이’ 데이터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적절함.

★정연중T : 거래 비용의 ‘정의’를 확인하고 판단했나요?

㉣번 선지(28.3%) : [B]는 데이터 이동권 법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 ㉡로 이동했을 때, [B]는 ㉣가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함.

★정연중T : [A]와 [B]의 ‘차이’를 인지하고 판단했나요?

㉤번 선지(41.1%) :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정연중T : 혹시 데이터 이동권의 ‘정의’를 대충 읽고 넘어가진 않았나요? 혹은 표시만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진 않았나요?

## [8~11] 수정 진동자 지문

(1단락)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압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압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에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압전 효과와,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압전 효과가 있다. 두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 하며, 수정이 주로 쓰인다.

① ‘저울’이 물체의 질량을 재는 방법

② 압전 효과에 대한 이해(선) → ‘초정밀 저울’이 미세 물질의 질량을 재는 방법 이해 가능(후)

★ 정연중T : 1단락을 다 읽고 2단락으로 넘어가는 찰나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저울’에 대한 내용은 희미하고, ‘초정밀 저울’에 대한 내용은 선명한가요? 경중을 두며 글을 읽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정연중T : 글쓰기가 압전 효과를 설명(1)한 뒤에 초정밀 저울이 질량을 재는 방법을 설명(2)할 거라고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던가요? 아니면 의식적으로 억지로 예측했나요?

•  
•  
•

(2단락) 압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에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압전 효과와,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압전 효과가 있다. 두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 하며, 수정이 주로 쓰인다.

①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 각각의 정의

: 1차 압전 효과(기계적 변형 → 전압 발생), 2차 압전 효과(전압 → 기계적 변형 발생)

② 압전체의 정의

③ 압전체의 예시

★ 정연중T : 2단락을 읽을 때, ‘압전 효과’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재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  
답했나요?

(3단락) 압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와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이다.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압전체라도 압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① ‘수정’을 ‘수정 진동자’로 만드는 과정

: ‘수정’ →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 → 원판 모양으로 변형 → 양면에 전극을 생성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진동 발생(2차 압전 효과) →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킴 →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 → ‘수정 진동자’

② 미세 물질이 수정 진동자에 달라붙어 질량 증가(인) → 수정 진동자의 고유 주파수가 줄어듦(과)

③ 질량 민감도를 구하는 공식 (질량 민감도 = 주파수의 변화 정도 / 측정된 질량)

★ 정연중T : 우선 ‘수정’을 ‘수정 진동자’로 만든 다음, ‘수정 진동자’가 진동 → ‘미세 물질’이 달라 붙고 → ‘주파수’가 줄어드는... 일련의 과정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펼쳐졌나요? 아니면, 이해가 가진 않지만 억지로 밑줄을 긋고 넘버링을 하면서 읽었나요?

★ 정연중T : 수정 진동자에 달라붙은 미세 물질로 인해 ‘감소한 주파수’를 통해 ‘미세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네요! 이 부분을 읽을 때, 답답했던 것들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나요?

★ 정연중T : 마지막 문장에서 [측정된 질량이 일정할 때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크다면 질량 민감도가 크다는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 그저 공식을 메모만하고 넘어갔나요?



(4단락)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 하는데,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

- ①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하는 방법(특정 기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응용하면 됨)
- ②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음(인) →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일정한 값을 유지함(과)
- ③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인) →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됨(과)
- ④ '반응 시간'의 정의(주파수가 감소하다가 일정한 값이 될 때까지의 시간)
- ★ 정연중T : 첫 문장에서 '농도'라는 단어만큼 '응용'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게 보이던가요? 다시 말해서,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응용할지 궁금하던가요?
- ★ 정연중T : '혼합 기체'와 '특정 기체'를 명확히 구분했나요?
- ★ 정연중T :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크면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말을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크면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로 바꾸어 읽을 수 있나요?

(5단락)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한다.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 ① '붙는 것'만으로 기체의 '정확한 농도'는 알 수 없음(문제점)
- ②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른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으면 농도를 알 수 있음(해결방안)
- ③ 농도의 민감도를 구하는 공식(농도 민감도 = 주파수 변화 정도 / 농도)
- ★ 정연중T : 5단락의 두 번째 문장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이해했나요? →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농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보니, '질량이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없다는 말이구나! → 이러한 사고 과정이 있었다면,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다음 문장이 반가웠을 겁니다.
- ★ 정연중T : 마지막 문장에서 농도가 일정할 때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크다면 농도 민감도가 크다는 생각을 했나요? 3단락 마지막 문장에서 유사한 사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엄청 빨리 읽혔나요?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메모만하고 넘어갔나요?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답 ②번 / 오답률 65%)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 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다.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단, 측정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의 상황은 변동 없음.)

- ① A의 진동자에 있는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의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겠군.
- ②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 ③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④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다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은 양이 서로 같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은 서로 같겠군.

①번 선지(23.1%) : <보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합 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려는 상황이다. 이때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려면 우선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놓은 주파수 변화 자료]로는 혼합 기체에서의 알코올 농도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정연중T : 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생각을 지문 읽을 때 했나요?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만 보고 ①번을 선택한 건 아니죠...?)

②번 선지(35.0%) : [일정량의 알코올]과 [일정량의 알코올+다른 기체] 중 후자의 질량이 더 크다. 그러므로 전자보다 후자의 주파수가 더 작다.

★정연중T : [비교 대상]을 명확히 한 후에 둘을 비교했나요?  
(혹시... 4단락의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주파수가 낮다’는 정보를 활용하여 선지를 판단했나요? 지금 선택지에서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80%일 때]와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70%일 때]를 비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

③번 선지(17.2%) : 수정 진동자에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한 것은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통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하기 위해서이다.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정연중T : 관련이 없는 두 문장을 하나로 결합하는 선지 구성은 익숙해져야 합니다. 선지를 읽을 때, 주어부와 서술부를 구분해서 각각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④번 선지(16.7%) : 농도 민감도는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A가 B보다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다면 농도 민감도도 A가 B보다 클 것이다.

★정연중T : 지문을 읽을 때, 공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수식을 메모하며 읽었더라도 시간이 조금 소요됐겠지만 알 수 있습니다.

A=B/C 일 때, [ A와 B는 비례 / A와 C는 반비례 / B와 C는 비례 관계 ]입니다.  
(이때, A: 농도 민감도, B: 주파수 변화 정도, C: 농도)

## [12~17] (가) 조선의 신분제 지문

(1단락)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賤役)을 담당했다.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 ① 양천제의 정의
- ② 양인과 천인의 차이점
- ③ 양인 신분의 사회적 분화 양상

- ★ 정연중T :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 → 16세기 이후 → 사회적으로 분화되었다]는 큰 맥락 속에서 세부 정보들을 챙겼나요? 즉, 글이 전개되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법적 신분제와 사회적 신분제가 구분되었나요? 아니면 역지로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정보를 정리하기에 급급했나요?
- ★ 정연중T : 앞으로 '법적 / 사회적 신분제'와 관련하여 글이 전개될 것임이 자연스럽게 예측되었나요?

(2단락)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에 변화가 일어났다.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100냥으로 정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 주는 길을 선택 했다.

- ① 조선 후기 농상공업의 발달(인) → 신분 안에서 분화 확대(과/인) → 신분제의 변화(과)
  - ② 노비가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나게 된 2가지 이유(속량, 도망)
  - ③ '국가의 재정적 이유로 인한 속량'과 '몰락한 양반의 재정적 이유로 인한 속량'
- ★ 정연중T : 2단락의 '신분 안에서 분화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1단락의 '사회적 신분제'의 서술 범주에 해당하고... 2단락의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1단락의 '법적 신분제'의 서술 범주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글을 읽었나요?
  - ★ 정연중T : 천인과 노비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을 읽을 때 '파악'은 했나요? (노비 ⊂ 천인)
  - ★ 정연중T : '천인'이 줄었다는 말은 '양인'이 늘어났다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이 '사회적 신분'이 아닌 '법적 신분'의 변화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나요?
  - ★ 정연중T : '천인'이 '양인'으로 전환 → '양인'은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져야 함(1단락) → 국가 재정 운영상 유리 1단락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국가 재정 운영상 '왜' 유리해지는지를 이해했나요?  
1단락에서 언급한 '양인'의 특징이 기억나지 않을까봐, 필자가 친절하게 다시 서술해준 것도 보이나요?

(3단락)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유학(幼學)’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㉔굳어졌다.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㉑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에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직역: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의무자로서의 역할

- ① 군역 면제 특권(인) → 상민층에서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 발생(과)
- ② ‘유학 직역의 획득’이 제도적으로는 신분 상승을 의미하지만, ‘온전한 양반’은 아님
- ③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 ④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민층의 노력

★ 정연중T : 1단락에서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지는 신분인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 양반은 중인/상민과 마찬가지로 ‘양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군역 면제’ 대상입니다. 공통점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양반 vs 중인/상민]으로 구분했나요?

★ 정연중T : 2단락은 ‘법적 신분’의 상승을, 3단락은 ‘사회적 신분’의 상승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분 상승이라는 이러한 거시적인 글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나요?  
2단락 = 법적 신분 상승 [천인 → 양인] / 3단락 = 사회적 신분 상승 [상민 → 양반]

(4단락)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非)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다.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 ① 조선 후기 신분 상승 현상(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 >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

★ 정연중T :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 >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과 관련된 내용은 읽기 속도를 ‘감속’하여 읽었나요? 그 외의 내용은 앞 내용의 반복이므로 읽기 속도를 ‘가속’하여 읽었나요?

마지막 단락이라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유류분 제도 지문]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마지막 단락에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항으로 출제될 수도 있구요.

글을 빨리 읽으려면 ‘감속 구간’과 ‘가속 구간’이 자연스럽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특히 ‘산문 영역’에서 감속과 가속은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아이들이 산문 문학을 푸는 모습을 보면, 1등급은 5-8분 걸리는데, 3등급은 10-15분이 걸립니다. 시험장에서 ‘5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본 분석서의 목적상, 읽기 속도 조절과 관련된 내용은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12~17] (나) 조선의 신분제 지문

(1단락)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의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통해, 19세기의 정약용은 『경세유표』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① 실질적으로 ‘능력주의’가 적용이 안 되는 현실

② 유형원과 정약용의 도덕적 능력주의 개혁론

★ 정연중T : 우선 [도덕적 능력주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다음, [유형원과 정약용의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각각의 개혁론이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를 설명해 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던가요?

★ 정연중T : 그냥 능력주의도 아니고 하필 ‘도덕적’ 능력주의네요. 이 점이 글을 읽을 때 궁금하던가요?

(2단락)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 국가의 건설이었다.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① 유형원이 제시한 개혁론의 기본적인 생각

: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 +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 국가 건설

② 노비제 폐지 주장

: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은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논거) → 노비제 폐지(주장)

③ 비도덕적 직업군 철폐 주장

④ 사민(사농공상)으로 편성할 것을 주장

⑤ 공거제를 통한 관료 임명 과정

: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 → 여러 단계의 교육 → 최소한의 학식 확인 → 관료 임명

⑥ 지방에도 관료를 분배(수단) → 도덕적인 향촌 사회의 풍속 형성(목적)

★ 정연중T : 노비(신분)와 광대(직업)의 의미 범주가 자연스럽게 구분되던가요?

★ 정연중T : 천하의 도리에 어긋나는 노비제와 광대와 같은 직업군에 반대하는 모습이...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어긋나는 것들과 비도덕적인 것들에 반대하는 것으로... 읽히던가요?

다시 말해서, [2단락의 첫 문장]과 [2단락의 두 번째 / 세 번째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던가요?

★ 정연중T : [기존의 직업군 - 비도덕적 직업군 = 사민(사농공상)]임을 인지하며 읽었나요?

아울러, 사민이 도덕적 직업군이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었나요?

★ 정연중T : 관료 임명 과정을 ‘모두’ 기억하지 않고 ‘이런 수순을 거치는구나~’ 정도의 태도로 읽었나요? 모든 정보를 ‘기억’하려다 보면, 정작 본인이 이 글을 읽고 있던 ‘읽기 목적’을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3단락)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농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 구역 개편을 구상했다. 이에 맞춰 사(士) 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사 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에서 사 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① 정약용의 행정 구역 개편\*

: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 [사농공상] → 사 집단을 재편\* [사/농공상]

\*개편 : 고쳐 편성함.

\*재편 : 다시 편성함.

② 정약용이 제시한 관료 선발 과정

: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 → 선사 선발 → 일정한 교육 → 여러 단계의 시험 → 관료 선발

③ 모든 거주지에서 관료를 선발하지만, 사 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

④ 사를 뒷받침(논거) → 노비제 유지(주장)

★ 정연중T : 정약용은 사민으로 구분한 유형원의 직업군에서 ‘행정 구역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형원은 17세기 개혁론이고 정약용은 19세기 개혁론임을 감안하여 납득했나요?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나요? (납득하는 내용보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많아지면 독자는 정보량이 많다고 느낍니다.)

★ 정연중T : 정약용이 제시한 [추천 → 교육 → 확인/시험 → 선발]의 과정은 유형원과 유사하지만, ‘선사’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또한 유형원은 17세기 개혁론이고 정약용은 19세기 개혁론임을 감안하여 납득했나요?

실전에서는 저도 놓친 내용인데, 유형원은 ‘여러 단계의 교육’을 제시했고, 정약용은 ‘여러 단계의 시험’을 제시했습니다. 추측해보자면, 유형원은 관료의 도덕적 능력 ‘함양’을 중시했고 정약용은 도덕적 능력을 갖춘 관료를 ‘검증’하는 절차를 중시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정약용은 ‘선사’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도입한 것 같네요. (이러한 글 읽기의 ‘틈새’를 발견하는 것도 글을 읽는 즐거움 아닐까요?)

(4단락)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에 주목했다. 유형원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에 정치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 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① 유형원과 정약용의 공통점

: 사 집단에 권력과 경제력 집중 + 계층 간 차등을 엄격히 유지(수단) →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목적)

★ 정연중T : 2단락의 첫 문장에서 읽었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나요?

12.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번 / 오답률 49.5%)

- ①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 ②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다.
- ③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 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다.
- ④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 ⑤ 조선 후기에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②번 선지(24.4%) : 법적 신분제는 양천제를 말한다. 양천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적적함.

★정연중T : 법적 신분제와 사회적 신분제를 구분하며 읽었나요?

③번 선지(13.5%) : ③번 선지는 '몰락한 양반'에 대한 설명이다.

★정연중T : '이유나 근거' 관한 서술은 특히 강하게 읽어야 합니다.

ex) 나는 배가 고파서 집에 갔다. = [배가 고프(원인) → 집에 감(결과)]

ex) 나는 박효신이 잘생겨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 [잘생김(근거) → 성공(주장)]

위의 두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정보는 '원인'과 '근거'에 서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힘주어 읽는 습관을 들이면, 필자의 생각에 좀 더 공감하며 읽게 되고, 결국 다음 이어질 내용을 잘 예측하게 될 것입니다. 본 분석서의 목적상, 예측과 관련된 내용은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④번 선지(50.5%) : 유학의 증가 현상은 양인 안에서 분화된 '사회적 신분'과 관련된다. 또한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는 '법적 신분제'인 양천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 준다는 진술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연중T : 서술 범주가 다른 두 내용을 역지로 결합하여 한 문장을 만드는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11번 문항 해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함정은 주부와 술부를 구분하여 선지를 읽고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13. 일련의 개혁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⑤번 / 오답률 60.3%)

- ① 유형원은 자신이 구상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을 없애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② 유형원은 지방 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③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 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④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 구역 개편 방안을 구상했다.
- ⑤ 유형원과 정약용은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하여 교육한 후 관료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②번 선지(13.0%) : 관료를 지방에도 분배하면 향촌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유형원의 개혁론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된다.

★정연중T : 윗글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면, 선지를 판단할 때 '선지의 말'이 '본문의 말'로 치환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지가 '윗글을 재진술'한 어구'로 구성됨을 감안하면, 윗글을 '이해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식으로 못 풀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죠.

\*재진술(paraphrasing) : 의미는 같으나 표현을 달리는 것.

③번 선지(26.4%) : ③번 선지는 유형원과 정약용의 공통점입니다.

★정연중T : 마지막 단락을 근거로 풀어야 하는 선지입니다. 선지를 판단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판단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애초에 글을 읽을 때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두어야, 선지를 판단할 때 본문의 '특정'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④번 선지(14.7%) : 정약용의 행정구역 개편의 내용입니다.

★정연중T : 이 선지를 선택한 학생은 '시간'이 없어서 짝은 학생들이 아닐까요...?

⑤번 선지(39.7%) : 시험이 아닌 추천으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연중T : 하나, 5번 선지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안 보였나요? 실수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의 선지는 여러 개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선택지가 요구하는 판단 요소가 몇 개인지 빠르게 인지하는 연습은 이미 의식적으로 반복하여 숙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 '시험'이라는 단어가 보였음에도 틀렸다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형원과 정약용이 주장하는 관료 선발 과정 각각을 확인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셋, 비교/대조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유형원과 정약의 공통점을 대응시키며 읽지 않았나요?

15. (나)를 바탕으로 다음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번 / 오답률 68.5%)

ㄱ. 아래로 농공상이 힘써 일하고, 위로 사(士)가 효도하고 공경하니,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ㄴ. 사농공상 누구나 인의(仁義)를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ㄷ.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ㄹ.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계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 ① 유형원은 ㄱ과 ㄴ에 동의하겠군.
- ② 유형원은 ㄴ과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유형원은 ㄴ에 동의하지 않고, ㄹ에 동의하겠군.
- ④ 정약용은 ㄴ과 ㄹ에 동의하겠군.
- ⑤ 정약용은 ㄱ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ㄱ. ‘아래로’, ‘위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분’을 의미.  
 사(士)가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도덕적 능력’이 있음을 의미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은... ‘도덕 국가 체제’와 연결.

→ 유형원(o), 정약용(o)

★정연중T : 본문의 말로 치환이 안 되는 것은 ‘구체화/추상화’ 능력 혹은 ‘재진술’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구체화/추상화’의 원리를 이용하여 아래의 두 문장을 연결해봅시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 (1) 개미가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운반하는 것 → (추상화) →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
  - (2) 개미가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운반하는 것 ← (구체화) ←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
  - (3) 개미가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운반하는 것 → (재진술) → 곤충이 무거운 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들고 움직이는 것
- 앞으로 국어 공부를 할 때, 이러한 관계를 갖는 문장들이 서술되면 ‘같은 의미로 처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ㄴ. 유형원과 정약용 모두 도덕적 능력이 있으면 선발 절차를 통해 관직(사)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 유형원(o), 정약용(o)

★정연중T : 문제를 풀기 전에 유형원과 정약용의 ‘공통점’에 힘주어 읽었나요? 두 대상을 비교/대조하는 글은 반드시 두 대상의 ‘대응’되는 지점을 찾고 ‘기준’을 바탕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야 합니다.

ㄷ. 정약용은 ‘노비제’를 유지하자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기회가 열린다는 ㄷ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유형원(o), 정약용(x)

★정연중T : 문제를 풀기 전에 유형원과 정약용의 ‘차이점’에 힘주어 읽었나요? 두 대상을 비교/대조하는 글은 반드시 두 대상의 ‘대응’되는 지점을 찾고 ‘기준’을 바탕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야 합니다.

ㄹ. 정약용과 유형원 모두 도덕적 능력이 있다면 관료 선발 절차를 통해 ‘경계를 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둘 다 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유형원(x), 정약용(x)

★정연중T : 뒷글의 말로 재진술되었나요? [상민이 경계를 넘는 것 → (재진술) → 지배층인 사로 이동]